

2004년 총선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2004. 4. 6.

2004총선시민연대

www.RedCard2004.net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전화 02)732-9787~91,723-0808 / 팩스 02)723-0584

자료집 목차

[1부]

식 순	2
낙선대상자를 발표하며	3
선정경위	6
총선시민연대 결성 및 주요활동	
낙선대상자 자료조사 및 선정	
낙선대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선정결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15
향후 사업계획	18
[부록] 유권자위원회	20

[2부]

낙선대상자 명단	21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 명단	91

식 순

○ 인 사 말

○ 낙선대상자를 발표하며

○ 선정기준 및 경위 발표

○ 명 단 발 표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사 업 계 획 발 표

○ 질 의 응 답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낡고 썩은 정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속엔 지난 4년의 정치현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슴 한편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민은 정치인의 위선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이들을 심판할 주권자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인, 민의를 배반한 정치를 기억하고 심판함으로써 진정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하듯 이번 총선은 단순히 4년마다 치르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역사의 전진을 이뤄낼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낡은 관행에 발목 잡혀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낡고 부패한 정치가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국민을 위한 일꾼들의 집단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거둬들이는 범죄 집단에 다름 아니었으며, 국회는 정쟁과 폭로가 난무하는 전쟁터일 뿐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빗나간 권력욕은 급기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폭거를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이 같은 정치 폭거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낡고 썩은 정치를 뿌리뽑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4월 15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5일은 국민을 무시하고 온갖 비리와 반유권자적 정치행태를 보여왔던 정치인들에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비리를 일삼는 정치인들을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17대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될 부패무능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총선시민연대는 그 동안 정치인들의 과거행적을 철저히 살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낙선대상자 명단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일 뿐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그 어떤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들은 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거나 선거법을 어겨 도덕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될만한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또한 과거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거나 반인권적 전력이 있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인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 행태를 반복해 유권자들의 지탄을 받는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히 2004총선시민연대는 3·12 대통령탄핵에 가담한 정치인들은 예외없이 낙선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민의를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이들이 더 이상 정치현장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들을 정치현장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니다. 희망의 새 정치를 일어나갑시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오늘 최종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합니다. 이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온갖 비리와 반유권자적 정치 행태를 반복해온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운동이며, 정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미래를 밝혀 나가하고자하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주권선언운동인 것입니다.

병든 정치, 썩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유권자의 힘입니다. 이제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썩은 정치인들을 물러나게 만들고 국민의 소리

에 귀기울이며 정직하게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들을 제대로 세워봅시다. 유권자의 힘으로 희망의 정치, 희망찬 대한민국을 일궈나갑시다. 2004총선연대는 오늘의 낙선타령자 발표가 유권자 행동의 커다란 한걸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선 정 경 위

1. 2004총선시민연대 결성 및 주요 활동

- 2004년 2월 3일 전국의 360개 시민사회단체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 총선시민연대는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천반대 인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자료조사, 검증, 심의과정 등의 단계를 거쳐 2월 5일에는 16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1차 공천반대명단 66명을 발표했고, 2월 10일에는 현역국회의원 추가대상자 2명과 원외인사 42명 등 44명의 2차 공천반대명단을 발표, 총 110명의 공천반대자를 발표(1명은 명단 발표 후 공천신청철회)하였습니다.
- 총선시민연대는 3월 10일 총선연대 홈페이지(www.redcard2004.net)를 통해 후보 공천에 있어 유권자들의 후보검증에 도움을 주고, 경선 또는 공천심사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 2차 낙천명단 발표과정에서 수집된 103명의 정치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 후보등록이 완료된 4월 1일 기준으로 각 당의 최종공천현황 분석결과 총선연대가 선정한 109명의 낙천대상자 중 공천이 확정된 정치인은 56명(비례대표 포함)(51.4%)으로 한나라당은 낙천대상자 50명 중 25명(50%), 새천년민주당은 39명 중 21명(53.8%), 열린우리당은 14명 중 6명(42.9%), 자유민주연합은 3명(75%)을 각각 공천하였습니다.

2. 낙선대상자 자료 조사 및 선정

1) 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대상 : 2004년 17대 총선 출마자 전원
- 조사기간
 - 각 당 공천신청자 조사기간 : 2004년 1월 16일 - 2004년 4월 5일
 - 비례대표 및 무소속 후보 조사기간 : 2004년 3월 22일 - 4월 5일

2) 조사 자료

- 17대 총선 출마자 전원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
 - 의정 활동 및 의정 활동 평가 자료, 시민사회단체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 관련 언론 자료
 - 전과 기록 및 관련 자료, 각종 판례 등 법률 문헌
- 1, 2차 공천반대자 조사자료 일체
- 추가 제보 및 소명자료 : 제보 20건 (단체 : 16건, 개인 : 4건)
소명 55건 (문서 : 45, 구두소명 : 10건)
- 각 후보 전과, 재산, 납세 관련 선관위 신고사항
- 지역단체, 부문단체 낙선대상자 선정자료 일체

3) 자료검토 상의 특이사항

- 1, 2차 낙천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각 당이 순차적으로 발표한 지역구 공천자, 지역에서 출마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1차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1개의 지역총선연대와 9개의 부문공동대표단체의 자료조사 보고서를 취합하여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 총선시민연대는 17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줄세우기, 계파안배, 공천헌금 시비 등' 지난 수 십 년간 반복되어 온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구시대적인 폐습을 떨쳐버리고, 직능별 대표성, 전문성, 개혁적 소신을 두루 갖추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변할 만한 소양을 갖춘 인사를 국민의 대표로 확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4월 1일 최종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자 151명<한나라당(43명), 민주당(26명), 열린우리당(51명), 자민련(15명), 민주노동당(16명)>의 면면을 검증하는 자료조사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각 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는 총 2,691명으로 이 중 총선연대는 1차로 1,391명의 ▲언론자료, ▲부패, 비리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문,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우, 국감 제출자료, 선관위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4월 1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 추가로 확인된 후보자(5개 정당 비례대표 151명, 무소속 후보 224명 포함)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선연대가 검토한 17대 총선 출마자는 기존 검토자 중 공천 탈락 및 출마 포기자를 제외하고 지역구 963명, 5개 정당의 비례대표 151명 등 총 1,114명이었습니다.

3.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 총선연대는 3월 17일, 3월 24일, 3월 31일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민여론, 시민사회의 대응, 새로운 국면에서의 낙선운동 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안 표결 의원 전원을 원칙적으로 낙선대상자로 선정기로 잠정 합의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4월 5일 유권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총선연대 정책팀은 1월 16일 열린우리당의 발표를 필두로 각 당이 3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한 공천신청자 명단에 대해 자료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1개 지역총선연대 중 3개 지역의 낙선대상자 자체 발표 결과, 9개의 부문공동대표단체의 모니터 자료, 3개의 시민사회총선단체의 낙선대상자 자체 발표 결과를 취합,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대상자 중 추가조사와 본인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0여명의 후보에게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4월 5일까지 45건의 회신공문과 10건의 구두해명을 접수하였고, 20건의 단체 및 시민의 제보를 접수 검토하였습니다.
- 총선연대 정책팀은 후보등록이 마감된 4월 1일부터는 224명의 무소속 후보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확정자 151명의 집중검증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월 3일 1차(현역 국회의원), 2차(각 당 공천신청자) 낙선대상자를 포함하여 무소속, 비례대표 후보 등 1,114명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종 274명의 주요검토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2004년 4월 5일 오후 3시, 서울 봉도수련원에서 유권자위원회를 소집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검토 대상자'로 선정한 274명에 대해 각각 토론을 벌이고, 수인에 대한 투표 등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유권자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대표자회의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어 4월 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개최한 '공동대표단, 집행위원, 정책위원,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유권자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을 검토하여 2004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 선정기준

-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 선정에 있어 당선 가능성이 전무하고 낙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후보자들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검토 대상자를 주요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후보자로 했으며 군소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주요공직자였거나 전문직 종사자 등 유력인사에 한정했음을 밝힙니다.
- 1·2차 공천반대자 중 출마자 65명(당초 66명 중 1명은 후보사퇴)은 전원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1, 2차 공천반대자 선정에 적용한 6가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①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②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③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은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④ 의정활동 성실성 ⑤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⑥ 도덕성 및 자질>

위의 6가지 기준 중 ① 부패·비리행위, ② 선거법 위반자 중 당선무효형 이상인 경우, ③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④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중 경선불복, 상습적·반복적 철새행태는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우선 적용하였고, 나머지 기준들은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총선연대는 지난 3월 12일 제16대 국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 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반유권자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로 낙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권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을 전원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 1명은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총선연대는 불가피하게 탄핵안 표결에 참가한 국회의원 중 지역구 출마자 135명 전원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비례대표 후보가 된 4명을 부적격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 한편 총선연대는 지난 2월 발족당시부터 누차 돈 선거 추방을 위한 감시활동과 함께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 확정전이라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총선연대는 비록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깨끗한 선거를 이루고 돈선거는 반드시 단죄한다는 차원에서 17대 선거에서 후보자 혹은 선거법상 연대책임자가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 후보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단, 기타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 개개인이 직접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낙선사유에 해당할지라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가 각 정당의 정치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정당투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 선정 지표는 낙선대상자 선정 지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총선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병역, 납세, 전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들의 면면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총선연대는 1차로 재산 및 납세와 관련해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거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혹이 있는 12명의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증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낙선사유에 포함시키기 못했지

만 이후에라도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 후보자의 전과경력(은 국민의 대표로서 갖춰야할 도덕성과 자질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총선연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과의 경우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오래된 전과를 문제삼는 것이 부적절하고, 후보자 등록시 신고 대상이 금고형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선연대 정책팀이 자체로 파악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80년 이전의 범죄전력, 금고형 이하의 형량은 원칙적으로 낙선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단 이들의 정보도 유권자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직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직재직시의 범죄와 뇌물·알선수재 등의 공직관련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선거법 위반 범죄 등의 경우는 금고형 이하라 할지라도 낙선사유로 삼았습니다.

4. 선정 결과

- 낙선대상자 : 총 208 명
 - <낙선대상자 1> : 총 108 명
 - ※ 탄핵 사유와 중복된 후보 : 총 35 명
 - <낙선대상자 2>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단일사유 선정 후보 : 총 100 명
(한나라당 68명 / 민주당 23명 / 자민련 3명 / 무소속 6명)
-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 : 총 8 명
 - <낙선대상자1>과 <탄핵찬성표결> 병합 : 민주당 1명
 - 탄핵찬성 표결 단일사유 3명 : 민주당 2명 / 자민련 1명

5. 낙선대상자 1 분석자료

○ 정당별

한나라당	32명 (낙선대상자 중 29.6%)
민주당	29명 (낙선대상자 중 26.9%)
열린우리당	10명 (낙선대상자 중 9.3%)
자민련	18명 (낙선대상자 중 16.7%)
민주노동당	1명 (낙선대상자 중 0.9%)
국민통합21	1명 (낙선대상자 중 0.9%)
무소속	17명 (낙선대상자 중 15.7%)

○ 지역별

서울	22명 (20.4%)
부산	4명 (3.7%)
대구	2명 (1.9%)
인천	6명 (5.6%)
광주	2명 (1.9%)
대전	0명
울산	2명 (1.9%)
경기	23명 (21.3%)
강원	4명 (3.7%)
충북	4명 (3.7%)
충남	9명 (8.3%)
전북	3명 (2.8%)
전남	9명 (8.3%)
경북	8명 (7.4%)
경남	9명 (8.3%)
제주	1명 (0.9%)

○ 원내외 분포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 중 낙선대상자 : 45명 (41.7%)

원외출마자 중 낙선대상자 : 63명 (58.3%)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금 우리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
어야 할 국회가 민의를 배신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사
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체념과 냉소로
외면하는 것은 당장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며 역사와 후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되새기며 유권자 여러분에게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참여와 낙선운동에 동참할 것
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
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
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권의 오만함에 분노와 좌절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
니다.

마치 범죄집단처럼 수 백억 대의 불법 비자금으로 선거를 치르는가 하면, 비리에
연루된 동료의원들을 감싸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심지어 석방동의안을
통과시켜 감옥에 있는 부패정치인을 구출해 내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
습니다. 개혁 법안은 국회에만 들어가면 누더기가 되었고, 오히려 그 법안을 이용
해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카드부채로 수많은 가정이 파탄 나고 청년실업이
증가해 국민들이 자살을 선택할 때도 그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진정 국민을 유권자로 여긴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들에게 국민은 그저 선거철에만 필요한 엑세서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치

권은 16대 국회 마감 한 달을 앞두고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유권자의 뜻과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저 무력한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희망을 간직 한 채 탄핵반대와 민주수호를 외쳤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어올랐던 촛불은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의 물결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희망의 물결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제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인들에게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나의 한표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변화해야 합니다. 금품과 향응, 각종 기부행위를 물리침으로써 돈선거, 부정선거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지연과 학연을 따지기보다 정책과 인물을 검증해 유능하고 깨끗하며, 비전을 제시할 정치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17대 국회를 가장 깨끗하고 일 잘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으로 선정한 낙선대상자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그토록 비난해오던 부패 비리 연루자, 선거법 위반자, 철새정치인,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던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행사이자 항의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유권자위원들은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에게 낙선운동의 대열에 함께 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국민 모두의 것이듯 낙선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의 희망 또한 유권자와 국민 모두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추방합시다 !
권력을 쫓는 철새정치인을 추방합시다 !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 오만한 정치인들을 추방합시다 !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추방합시다 !
돈과 금권 선거를 자행하는 정치인을 단죄합시다!
유권자의 한 표를 현명하게 행사합시다 !

2004년 4월 15일은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4월 15일 밤에 거리거리마다 승리의 함성이 울리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6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는

2004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

사업계획

1. 낙선대상자 낙선운동

-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 발표 이후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00년에 비해 급속히 활성화된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운동이 선거운동기간 중 광범위하게 허용된 개정 선거법을 반영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총선연대는 온라인을 통해 2000년 보다 효과적인 낙선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참여한 단체의 홍보물과 회원 모임 및 생활 현장에서의 조직적 회원 활동을 통해 낙선운동을 전국적으로, 각 생활의 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2. 검증되어야 할 17대 총선 후보자 명단 및 정보 공개

-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를 검토, 선정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결격 사유가 있으나 낙선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그 세부 적용 지침에 따라 낙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검증되어야 할 후보자 명단'을 4월 8일 발표하고, 그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들 역시 유권자의 엄중한 판단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 총선연대는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납세자료를 분석하여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거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추가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내용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3일 1차로 12명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선관위 제출 자료를 계속 검토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명을 요청할 것이며,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문제가 확인되는 후보자는 그 명단과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3. 정당투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정당정책 평가

- 17대 총선은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는 '1인2표 정당명부제'가 최초로 실시되는 총선거입니다. 따라서 지난 16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약의 이행 정도,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진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총선연대는 4월 9일 각 정당의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에게 바람직한 정당투표를 위한 판단기준과 정보를 제시할 것입니다.

[부록]

유권자위원회

○ 구성 <성, 연령, 직업, 광역별 구성비>

2004총선시민연대 참가단체 소속 회원과 일반시민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활동

- 표본 구성비 설정 : 2004. 1. 12 - 2004. 2. 3
- 유권자위원회 구성 : 2004. 3. 29 - 2004. 4. 5
- 2004. 2. 4 1차 낙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유권자위원회 개최 : 98명 참석
- 2004. 2. 9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유권자위원회 개최 : 92명 참석
- 2004. 4. 5 낙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유권자위원회 개최 : 54명 참석